

요약

생활임금제 도입 취지 관련 주체 모두 공감 장점 극대화·문제점 개선해 확산 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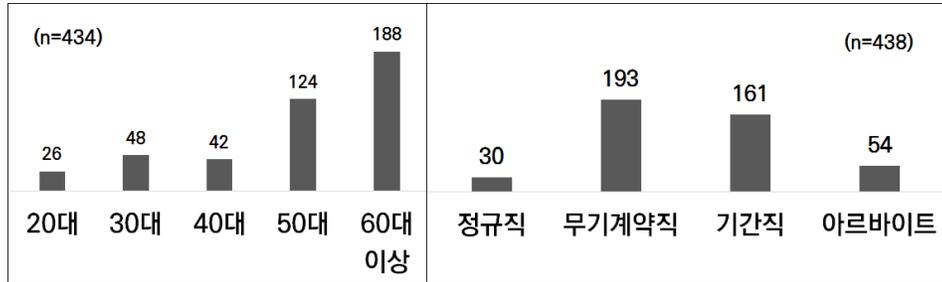
생활임금제 2013년에 국내 도입... 지난 3년간의 성과 측정 필요

2013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다양한 효과가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민생정책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는데,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은 노동자와 기업, 공공부문 모두에게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초기의 국내 생활임금제 논의는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확보함으로써 제도 확산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다. 생활임금제 수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제도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정책적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활임금제 주요 수혜 대상은 기간직 등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의 4개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제도 수혜 근로자의 과반수가 50대 이상이었다. 계약형태로 살펴보면 대부분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직이었으며, 정규직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수령액은 현재 150만 원 정도였으며,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에 10만 원가량 월급이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생활임금제의 시행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 생활임금제가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 생활임금제 수혜 대상

근로자들 “생활임금제 시행 후 관계·업무·삶에서 긍정적으로 변화”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변화의 정도를 관계, 업무, 삶 등 3개의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제도 시행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근로자들은 고용기관·동료·고객 등 관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생활임금제 시행 이전보다 근로자들의 고용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충성심과 애사심도 이전보다 커졌다고 응답하였다. 이직을 고려하지 않게 되었으며, 고용기관·동료·고객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이전보다 고객이나 동료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으며 고객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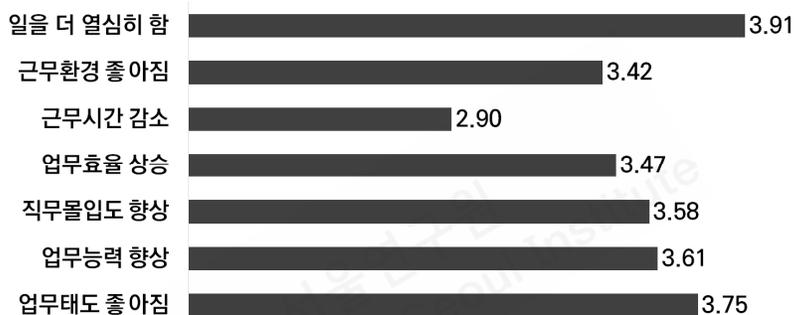
둘째, 생활임금제 시행은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한 근로의욕을 상승시키는 등 업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제 시행 이전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으며 직무 몰입도가 향상되는 등 업무에 대한 마음가짐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하였다. 업무능력 향상, 업무효율 상승, 나아진 근무환경 등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더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근무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임금제 시행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추가적인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교육 기회가 증가하였다. 변화정도가 미미하긴 하지만 돈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으며 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 5점 척도(5점 매우 그렇다, 1점 매우 아니다),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의미

[그림 2]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관계 측면의 변화 정도



주: 5점 척도(5점 매우 그렇다, 1점 매우 아니다),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의미

[그림 3]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일(업무) 측면의 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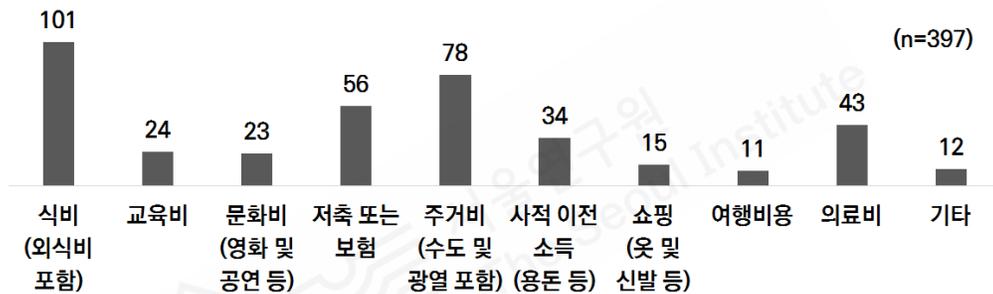


주: 5점 척도(5점 매우 그렇다, 1점 매우 아니다),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의미

[그림 4]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삶의 질 측면의 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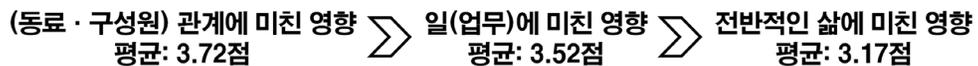
긍정적 성과 불구 낮은 생활임금 수준 제도 인지도는 아쉬운 부분

생활임금제 시행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보였지만 설문조사의 일부 항목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나타났다.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월 20만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큰 폭의 임금상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생활임금제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도 20%에 가까운 비율이 제도를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지출이 증가한 분야는 식비·주거비·의료비 등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이다. 반면에 문화·여행·교육비용 등의 지출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5]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지출이 늘어난 분야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항목별 변화 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고용기관·동료·고객과의 관계, 업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삶에서 변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6]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카테고리별 변화 정도 비교

이해당사자 모두 제도 만족도 높아... 내부 갈등요인은 여전히 존재

제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생활임금제 시행 성과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생활임금제는 적용 대상 근로자 외에도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구 담당자, 제도 도입 기관의 담당자, 비수혜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해당사자들이 생활임금제를 인식하는 태도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도 도입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기관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인해 고용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국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생활임금제 시행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적인 갈등요인은 존재한다. 우선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실질임금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조직내부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또한 생활임금제로 늘어나는 예산 부담은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단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생활임금액 등 불합리한 부분 보완해 제도 효과 극대화 바랍직

생활임금제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듯이 제도 시행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성과는 고용형태, 연령, 업무 등 개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생활임금제와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은 제도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갈등관계, 급여상승 수준에 대한 상대적 불만, 예산 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생활임금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정리한다면 생활임금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생활임금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제도의 혜택을 불

수 없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내부구성원 간의 갈등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제가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 발전·확산 주도해야

국내 생활임금제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생활임금제를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 시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에 전면 시행한다면 추후 민간부문에 제도 도입을 권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생활임금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상위법의 근거가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제의 체계적인 준비를 주도하고, 제도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시행방법이 지금보다 체계화되고, 운영방식이 단일화된다면 제도가 한층 더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본청이 주도하고 자치구가 협력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서울시 본청이 앞장서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들과의 워크숍,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전문가들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하철 광고, 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여 제도 시행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